

민주 이성운 의원 “현 검찰의 불공정 수사, 묵과할 수 없다” “검사 기피신청 가능토록 법 개정”

“기피 제도 남용해 고의로 사건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 막기 위해 기각 사유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2일 오전 국회의사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판사와 같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김건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제대로 된 소환조사와 단 한 번의 압수수색 없이 검찰이 김건희에게 안겨준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고발인이 검찰 수사의 과정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회유 의혹은 또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겠다”라며, 전경기부자를 회유하고, 증인들을 불러 ‘진술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목적을 높였다.

또한, “과거 2016년에도 피의자 측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이 2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판사와 같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가 긴밀한 관계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의 검찰 수사에서 불공정 수사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사도 불공정하면 이제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

야 한다.”라며,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적 수사를 일삼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사도 기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

져 왔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 검사 기피 규정이 없다.”라고 밝히며, “단지 ‘검사 윤리강령’에 ‘셀프’ 회피 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유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기피 심사를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민간감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원이 기피신청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피 제도를 남용해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각 사유를 명시하게 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검사는 가히 무소불위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검사 기피 제도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작점”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검사 기피 제도를 도입해 검찰을 반드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성운 의원 “女 전 대통령 수사, 尹 정권 몰락 초초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지난달 31일,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는 올해 15회째를 맞는 봉하음악회 참석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노무현 정신을 따라 검찰개혁과 민주주의의 길, 평화와 균형발전의 길을 걸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성운 의원은 “노무현 정신으로 윤정권에 맞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노무현 시계’의 또 다른 버전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치검찰이 김건희나 자기편은 봐주고, 마음에 안 드는 상대편만 주장한 수사할수록 결국 윤석열 용산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회, 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와 업무 협의

전주시의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2일 전주지역의 친수환경 조성과 오염원 제거 등 각종 업무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이광희 지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저제 친수환경 조성과 녹조 예방, 오염원 제거, 농수로 및 안전 시설 정비 등에 대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관우 의장은 “평소 전주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각종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전주완주 임실지사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전주시의회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각종 시설의 개발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희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이 끝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 전복이 10.9%

민주 한병도 의원 “개별 금고 내부통제 수준 신뢰 어려울... ‘깜깜이 공시 등 개선 시급’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지역 금고별로 분석한 결과 전복, 부산, 수도권의 부실자산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전북 10.92% △부산 10.8% △인천 10.29% △서울 10.05%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 5.43% △제주 5.44% △충북 6.22% △경북 6.94% 등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 은행의 전체 여신 중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자산 비율로,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평균 연체액이 △경기 25.6억원 △서울 21.0억원 △대구 8.7억원 씩이다.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7.24%로, 이보다 높은 지역은 △인천 9.06% △부산 8.46% △서울 8.00% △경기 7.96% △전북 7.81%이었고, 낮은 지역은 △강원 3.74% △제주 4.20% △충북 5.11%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당기순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새마을금고의 적자가 심

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3,228억원 △경기 -3,064억원이었고, 금고 1개당 평균순손실은 △서울 -2억 5,100만원 △경기 -2억 3,900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손실 규모를 고려해 예수금을 적정규모로 관리하고 경영효율화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다른 업권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개별 금고 금융 전문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경영혁신안의 점검은 물론이고 단위 금고별 ‘깜깜이 공시’ 등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최

10일까지 8일간 의정활동... 건의안 채택·의안 심사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3일 제413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임시회 첫날인 3일 개회식 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선

수 하승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특히 조례안이 45건으로, 이중 의원 발의는 40건에 달한다.

본회의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25년 예산안 심사를 대

비한 재정사업장 방문과 예산 심사기법 교육 등 연찬회를 가질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11월 본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4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채택한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8일간의 짧은 임시회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사회안전 약자를 돌보는 조례 제정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전북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의회사무처 지회)은 2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명나는 좋은 직장 만들기 ‘맞손’

전북자치도의회, 전북공노조 의회사무처지회와 협약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의회사무처 지회)은 2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과 박선주 지회장을 비롯한 도의회의 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원, 직원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사적인 지시 및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행위 지시 금지 △감정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협의 방안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사항을 의회 사무

처 직원에게 동등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 체결을 통해 도의회의 노동조합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더욱 활기차고 신명나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우리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의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선주 지회장은 “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일 예수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공백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진료를 이어가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 최소화”

최병관 행정부지사, 예수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일 예수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공백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진료를 이어가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와 추석 연휴 동안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환자 증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행정부지사는 신충식 예수병원장으로 부터 의료진 이탈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추석 연휴 대비 비상 진료 대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응급의료센터와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재활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행정부지사는 예수병원이 최근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예수병원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일반 공보의 3명을 3월 22일부터 과전 중이며,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올해 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 행정부지사는 “의료 공백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증·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추석 연휴 동안 비상 진료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응급 의료 체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울리, 최 행정부지사는 예수병원 비상 진료체계 점검을 마친 후, 2026년 말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인 전북 권역 통합재활병원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

/이만호 기자

내년 새만금청 예산 1226억 편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25년 예산 정부(안)을 지난해 대비 744억원, 154.5%가 증액된 1,226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은 핵심 SOC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하며, 새만금의 안전관리와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경안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10.2조 원의 민간투자 유치는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 과감한 규제 혁파 등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새만금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새만금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